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 이미현 010-9068-5132)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담당 : itaewon1029official@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23. 02. 15. (총 4 쪽)

보 도 자 료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 (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 오후 12시부터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59배를 진행합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큼니다.

3.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4.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사전행사 :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159배 진행행
- 순서 (사회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각 정당 연대 발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세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발언3.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4.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 발언5.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 발언6. **김미경** 분향소지킴이 자원봉사자,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
- 발언7.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 10인**의 공동호소문
- 기자회견문 낭독 : 희생자 이주영님 오빠 **이진우** 님, 희생자 송영주님 언니

10. 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는 서울시의 위법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 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 2. 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유가족 형제자매 공동호소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가 남긴 말입니다.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등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당신들께 말합니다.

왜 조례와 법률을 운운하며 우리 유가족을 강제철거에 응하지 않은 범법자로 낙인찍고 일반 국민들과 갈라치기 하려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시오.

한 번도 유가족 협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했다고 언론을 조작합니까? 당신에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면담이나 이야기도 없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만 통보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서 자꾸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을 상대로 기만과 농간을 일삼습니까?

참사의 책임자들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소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참사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참사 직후 서울시가 직접 분향소를 설치했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반강제적으로 국가 애도기간을 정하고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가 차려졌던 그때 그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조건 맞고 유가족이 원하면 무조건 틀린 것입니까?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주심으로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지정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이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기만을 바라는 그 비겁한 행동들이 당신들에게 낙인으로 남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묵살하고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용인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경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 힘든 수험생 시절을 이겨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선서문을 외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의 업무 대리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여러분께서도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저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들끼리 대치하고 싸워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험난하고 고단한 오늘 이 현장에 기꺼이 나와 주신 국민 여러분, 또 마음으로나마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 퇴근길에 잠시라도 들러 희생자를
추모해 주시는 직장인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유가족들에게
인공호흡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숨이라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지성과 도덕성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단지 육신과 감각만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속에도 우리 유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 규명을 외치다 입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살아갈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 어디서도 죽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